

차량 2부제 비웃는 공무원 '꼼수 운행'

광주 미세먼지 줄이기 헛구호

청사 밖 골목 암채 주차 일쑤 주민들 "주차장 됐다" 아우성 2부제 어긴 차량 제지도 안해 처벌 규정 없다며 관리 방치

겨울시즌(12월-3월)이면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량 2부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청사 밖 골목에 주차하기' 등 각종 꼼수를 통해 2부제를 지키지 않고 있어서이다.

관공서 인근 주민들은 2부제 시행 이후 동네 골목길까지 주차장이 됐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11일 한국환경공단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농성동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오후 4시부터는 광주지역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늘기 시작하는 겨울철을 맞아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광주지역 186개 행정·공공기관은 임직원 차량과 관용차 등에 홀·짝수제를 적용하고, 출근시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광주 하늘



11일 오후 광주시 북구 오치동 북부경찰서 옆 담벼락을 따라 차량들이 불법 주차돼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을 뒤덮은 이날도 차량 2부제를 지키지 않은 공무원들이 상당수였다. 이들은 인근 주택가에 암채 주차를 하거나 청사 주변에 불법 주차를 했다.

이날 오전 8시에 광주북부경찰서 내부는 짝수차량을 소유한 직원의 진입을 차단한 덕분에 경찰서 내 주차장에 민원인 차량을 제외하고 짝수차량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운행이 불가한 짝수번호 차량을 끌고 온 직원들이 경찰서 주변 골목과 담벼락 옆을 따라 불법주차하는 바람에 주변 골목길 등이 대혼잡을 빚었다.

같은 날 광산경찰서는 아예 차량 2부제를 제지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서 정문

에는 '오늘 홀수차량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입간판을 설치했지만, 짝수차량 통행에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주차장에서는 짝수 번호를 가진 직원들의 차량도 눈에 띄었다.

광주시교육청도 상황은 비슷했다. 교육청 후문부터 일대 주택가 골목길에는 시교육청 직원들의 차량이 상당수였다.

이날 골목길에 주차를 하고 교육청으로 출근한 한 직원은 "차량 2부제로 교육청 출입을 할 수 없어 주택가에 차를 세우고 걸어왔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차량 2부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각 기관들이 미세먼지

의 심각성과 차량 2부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관련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등 사실상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차량 2부제를 어기는 직원을 적발시 기관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는 지침은 있지만 차량 2부제를 지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과태료나 처벌 규정이 없다"며 "운행 불가 차량을 끌고 나온 직원을 단속할 권한도 없고, 관공서 주변에 주차를 해도 제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조합원간 다툼으로 변진 재개발 사업

풍향구역 재개발조합, 해임 총회 준비하는 조합원들 고소

광주시 북구 풍향 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련해 조합과 시공사 측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조합원들간 다툼으로 벌어지고 있다.

11일 광주북부경찰과 광주시 북구 풍향 구역 재개발조합측에 따르면 조합 측은 지난 10일 시공사 선정 과정에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포스코건설을 고소(광주일보 2019년 12월 10일자 6면)한데 이어 11일 조합 해임 총회를 준비하는 일부 조합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합은 또 오는 21일 개최할 예정인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조합 임원 9명 해임

을 위한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신청도 진행하기로 했다.

조합은 "조합 임원진의 해임발의서의 상세이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합 측은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 측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며 10여건의 사례를 동영상 증거 등과 함께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조합 측은 오는 28일 포스코건설 시공사 선정 취소 등을 안건으로 임시 총회를 열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19일 첫 심리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전교조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했다는 다툼은 행정소송 상고심 첫 심리가 내주에 진행된다.

11일 전교조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2016년 2월 이후 만 3년 10개월 만에 심리를 시작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전 정부 때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는 내용의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고 노조에서 활동하는 해직 교사를 탈퇴시키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교원노조법은 해직 교사 노조 가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박근혜 정부와 당시 양승태 대법원간 이뤄진 '사법거래'의 산물"이라며 "대법원은 신속히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대법 '3년7개월간 불륜' 현직 판사에 징직 2개월 처분

수년간 불륜을 저지르다가 들뜬한 현직 판사가 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A(36) 판사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유부남인 A 판사는 2014년 7월-2018년 2월까지 3년 7개월간 불륜 관계를 맺어왔다.

그는 지난해 2월 불륜을 의심하며 휴대

전화를 보여달라는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아내에게 10여일간의 치료를 필요할 상태를 입히기도 했다.

대법원은 A 판사 이외에도 열종알코올 농도 0.163%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B(40) 판사에게 감봉 2개월(보수의 1/3 감액), 아내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가 담긴 형사 판결문 3개를 이메일로 보내준 C(41) 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불법튜닝차 대신 다른 차 검사 합격 시킨 민간검사소

허위 작성 등 호남 20곳 적발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호남권 민간 자동차검사소가 적발됐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 4일부터 28일까지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전국 197곳의 민간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곳이 적발됐으며 이 중 호남지역(광주·전남·전북·제주) 검사소는 20곳에 달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수립한 '불법·부실 검사 방지대책'에 따라 전국을 5개 점검팀으로 구성해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반 내용은 ▲검사항목일부생략(14건) ▲검사기기관리 미흡(10건) ▲검

사시설·장비 기준미달(3건) ▲검사결과와 다른 검사표 작성(2건) ▲검사장면 및 결과 기록 미흡(8건) 등이었다.

정부는 적발된 민간검사소 37곳에 대해 검사소 지정취소(1건), 업무정지(36건), 검사원 해임(1건), 직무정지(33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튜닝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 합격 처리한 민간검사소에 대해서는 검사소 지정취소와 해당 검사원을 해임 조치했다

국토교통부 이종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내년부터 검사원에 대한 검사역량 평가를 실시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연령·학벌 차별 채용...광양보건대 전 총장 검찰 송치

총장 조카 가점 받아 합격

연령과 학벌에 따라 차별을 두고 직원을 채용한 대학교 전 총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최근 광양보건대 서모 총장을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시민모임의 진정서를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했으며 서 전 총장이 조카를 포함한 계약직 직원을 선발하면서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광양보건대는 지난 4월 계약직 직원을 선발하면서 모집 공고에 학벌이나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평가할 때 연령에

차등을 두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또 정관에선 직원 채용 시 학력 등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대학 측은 심사표를 새로 만들어 최종 학력에 가점을 부여했다. 결국 석사 학위 소지자인 서 총장의 조카가 가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광양보건대 임시사회는 지난 9월 서 총장을 직원 채용 비리와 이사회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파면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인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대학들의 각종 직원 채용에 대한 교육부의 상시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갑자기 쓰러진 할머니... 지나가던 전남대병원 의료진이 구해



○··길가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80대 여성이 때마침 지나가던 전남대병원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생명을 구하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

○··11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순환기 내과 배성아 전임의는 지난달 25일 광주 시 동구 전남대병원 인근 길에서 딸의 부축을 받고 걸어가던 80대 여성이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가까운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달려가 도움을 청했다는 것.

○··당시 응급실에 있던 응급의학과 박용훈 전공의와 임용덕 응급구조사는 300m 떨어진 현장에서 뛰어가 심폐소생술과 기관삽관술을 시행했으며, 응급실로 옮겨진 80대 여성은 신속한 조치 덕에 최근 식사도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

○··배성아 전임의는 "쓰러진 환자를 곧바로 발견했기 때문에 응급조치가 가능했다"며 "환자가 건강을 회복해 가고 있어 의사로서 작은 보람을 느꼈다"며 흐뭇하게 하는 모습.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